

Bush 재선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작성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이준규 부연구위원
【junkyul@kiep.go.kr】

主要內容

- 제 2기 부시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자유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적 자유주의, 다자주의, 양자간 자유무역 확대, 미주 자유무역지대 추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강화 등을 공화당이 장악한 양원의 지지를 받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감세정책 강화로 경기회복의 지속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대미수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이자율 상승이 예상돼 투자, 소비,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농축산물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통상 개방 압력이 높아 질 것이며, 한미 FTA 추진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와 궁극적인 폐지를 요구할 것임.
-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넣으면서,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으로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익도 매우 크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기존 전략으로는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없음.
-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1. 부시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 기본 방향

□ 제2기 부시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자유시장원리에 기초를 둔 세계시장의 확대임.

- 대선승리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함. 경제통상의 측면에서, 이는 자유주의 시장원리¹⁾에 입각한 기존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미국이 주도해 왔던 자유무역협정, 다자주의에 의한 국제 무역 규범 통일 등의 주요 통상 현안이 힘있게 추진 될 것임을 시사한 것임.

- Free Market 달성을 위한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3가지임.

첫째, 경쟁적 자유화, 둘째, 다자 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셋째,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에 있음.

□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민주당 케리후보의 정책인 '공정무역(Fair Trade)'과 유사한 개념. 이 개념의 궁극적 목표는 EU, 일본, 그리고 개도국으로 하여금 WTO 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의 적극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교역상대국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이용해 협상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역국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협상국을 압박하는 전략임.

1) 부시는 11월 4일 기자회견장에서 'I meant what I said' 를 누차 강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만이 가장 지고한 가치이며, 다른 것은 머릿속이 있지 않다"고 여러 번 강조함.

- 제 2기 부시정부는 더 많은 국가들과 FTA 추진 및 체결을 추구할 것이 확실시 됨.
-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적·안보적 이유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제 2기 부시정부의 출범은 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무부서인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비공개석상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누차 역설했음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모두 넘겨 승리하였음.
- 상원은 100석중 55석을, 하원은 435석중 231석을 현재 장악하여 제2기 부시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국내 기반이 확보되었음.
- 따라서 다자무역체제 확대 및 강화정책이 의회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새의회출범으로 현재 계류중인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의회 비준 통과가 확실시 됨.

- 의회의 협조를 받아 제2기 부시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WTO/DDA를 통한 협상 추진을 더욱 강력히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시행정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경쟁적 자유화라는 대외통상정책의 방향을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이루는 것임.
- 최근의 무역대표부 대표²⁾는 미국이 최우선으로 삼는 통상정책은 세계적인 통상 라운드가 잘 작동하도록 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경제자유화와 개방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함.
- DDA와 같은 다자무역 체제의 강화는 규범중심의 국제무역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여 미국에 의해 계속 장기적으로 추구될 것임.
- 그러나, 다자무역체제의 협상의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꺼려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등과 같은 보호무역조치에 관해 여타 국가들의 공동대처가 있는 경우, 미국이 원하는 다자무역체제로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질수 도 있음.
-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한 이익관철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는 다자주의적 접근보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국가를 선별적으로 뽑아 경쟁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 자유무역 협정에 관련된 방향과 진척상황

자유무역협정 방향	o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적극지지. 전례 없이 많은 자유무역추진 중임.
--------------	--

2) 9월 21일 줄릭 USTR 대표가 Asia Forum에서 발언한 내용임.

	<p>o 추진목적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치적·안보적인 경우를 동반할 것임.</p> <p>o 지속적 '자유무역협정'추구를 예상함. USTR대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추구 희망언급.</p>
자유무역협정(FTA)기조인국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모로코, 요르단, 칠레
FTA 미국의회에 상정중	바레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FTA 협상논의 진행중	태국, 이스라엘(농업부문만),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 추진

- 1990년 중반이후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및 복수국가간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인한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미국이익 증진을 위해 미주자유무역지대 논의가 시작됨.
- 실시가 불투명하지만, FTAA가 만약 계획대로 추진되어 제2기 부시정부 기간 내인, 2005년 12월 발효 된다면, 이는 인구 8억명, GDP 12조 달러의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함.

- FTAA의 타결은 중남미 국가들의 북미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함께, 역내외 투자를 촉진할 것임.

2. 한국에 대한 영향

□ 통상 개방 압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 미국은 협상이 결렬된 1998~99년 한국과의 BIT를 재추진하기 보다는 공화당의 상하원 의회장악에 힘입어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동맹국들과 성공하지 못할 FTA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고,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언급한 선결조건들은 스크린 쿼터, 농축산물 개방문제,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등임.

○ 스크린 쿼터와 FTA

- 주미대사는 한국은 FTA와 스크린 쿼터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강조하였음.
- 주요 발언과 최근의 무역정책으로 보아, 미국은 한미FTA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스크린 쿼터에 대해 한국이 지나치게 강한 거부를 보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개방을 막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미 FTA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선결 사안으로 내부전략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 2004년 5월 미 USTR은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에 올려놓고,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미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DDA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전자상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며, 그 전단계로 지적재산권협의를 위해 한국과 지적재산권 라운드(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ound)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농축산물 시장개방

- 미국은 1985년 미-이스라엘 FTA체결 이후 2004년에 와서야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재시작하는 특혜를 이스라엘에 제공했고, 2004년 미-호주 FTA체결시에도 미국설탕산업과 농가를 FTA협상에서 면제하는 제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NAFTA 규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농산물 시장접근을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SFTA)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김현중, 1995, p. 177), 양국의 일부 농산물(미국: 오렌지 주스, 설탕; 캐나다: 낙농제품, 설탕, 계란)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선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FTA추진시 농축산물을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업체는 대외통상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집단이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들의 이해를 무시하며 한미 FTA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임.

- 미 USTR대표는 최근(9월) 발언을 통해 한국과의 FTA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음.
- 한국 역시 농민들의 농산물개방에 대한 입장이 단호하기 때문에 양국간 FTA 추진협상과정에서 농산물시장개방은 어려운 사안이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크린 쿼타를 한미FTA 시작 전 선결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를 다른 국가들과도 양자 및 다자 협의를 지속해야 하는 공통적인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임.

- 미국은 쌀시장 개방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적 재산권협상에서는 미국이 비록 한국을 PWL에 올려 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관세장벽 제거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부 예상

- 비관세장벽 중 한국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같은 수입제한조치이므로, 미국과의 FTA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 거론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 부문은 미국이 국제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됨.
- 미국정부의 반발은 미국의회 의 보호무역주의 대세에 따른 선택이며, 협상과정에서 한국과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것임.
- 2005년 7월은 미국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역진흥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의 갱신이 이뤄지는 시기로, 미국의회 의 보호무역주의 의식, 강력한 무역제재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 부시 대통령은 제 1기를 통해 WTO제소의 유용성을 파악하고 있어, 제 2기는 1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소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

□ 제 2기 미국정부는 외교안보적 목적달성과 함께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우선 순위로 FTA를 제안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ASEAN 선점을 차단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지속적인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FTA 체결을 추진할 것임.

- 현재 미국은 일본에도 FTA를 제안한 상태이고,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국가와 협상테이블에 먼저 앉는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이 협상대상국 중 하나이지 최우선 국은 아님을 유념해야 함. USTR은 한미FTA는 한국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고 여러 번 밝혔음.

- 만약, 미국이 태국과 FTA를 체결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FTA에 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ASEAN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의 파급영향

-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대륙에 FTAA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의 최대시장인 북미시장을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에 내어주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내년초 미국의회의 비준이 예상되는 CAFTA도 유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되며, 미국 시장을 여타 개도국들에 내어주는 상황 발생 예상.
- 세계의 직접투자가 FTAA 이후 남미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이며, 이는 NAFTA 출범이후 대멕시코 역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로 보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

<대멕시코 FDI 유입>

단위:백만 달러

	1991	1992	1993	1994,NAFTA 효력 발휘
EU 국가	1,358	1,475	990	1,951
NAFTA 국가	3,238	5,826	4,916	8,124
아시아국가들	191	422	165	1,096

자료: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Yearbook

- 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을 해외직접투자를 미주자유 무역지대의 남미국가들에 내어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 재정적자로 인한 영향

-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0~2004년 GDP 대비 6.8% 까지 증가하여, 50년 만에 최고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규모로는 5,210억 달러에 달함.
-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인해, 2001년과 2003년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안이 영구적인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라크전 개전 이후 전비 지출 2000억 달러에 25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전비 지출 요구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2005년 재정 적자규모는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의 동반 이자율 상승이 2005년도에 예상되므로, 한국도 같이 이자율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나, 국내 경제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감축노력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에 유리하나, 중장기적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GDP, 실질 소비, 실질 투자에 영향을 줘, 한국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 경상수지적자로 인한 영향

- 경상수지적자는 제2기 부시 정부 출범이후 환율절상압력으로 가장 먼저 다가올 것임.
- 2003년의 미국의 총경상수지 적자규모 5,300억 달러, 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93억 달러, 2004년 8월에만 미국의 대중 경상수지적자 150억 달러에 달함.
-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미국의 산업경쟁력 회복을 통해 수출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키거나, 교역상대국에 통상압력을 넣어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거나, 달러화를 평가 절하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임.

- 첫 번째 방법은 단기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따라서 제2기 부시정부는 단기적으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통화, 특히 중국, 한국에 대해 평가절하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

□ 유가에 대한 영향

- 부시는 국외적으로는 중동 산유국 우선의 석유정책을 고수할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에너지절약(Conservation)보다는 원유공급을 늘리고, 정유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임.
- 국내석유생산이 태풍 아이반의 영향과 정유시설 부족 등으로 예년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미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저유황유기준에 따른 가솔린을 시판하기로 되어 있어, 많은 정유시설들이 시설개선을 위해 가동을 현재 중단한 상태임. 재가동이 되더라도 생산안정을 찾는 데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석유수요와 공급구조상의 여러 문제들은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부시 정부는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략석유비축량’(Strategic Petroleum Reserve)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고, 제2기 정부에서도 안보를 목적으로 비축량을 늘릴 것임. 따라서, 석유수요부문에서 유가 상승압박이 계속 잔존할 것임.

- 고유가는 부시정부와 함께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임. 1979년의 유가와 비교하여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을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이 있기는 하나, 현상황을 전제로 할 때 80달러는 비현실적임.
- 그러나, 미WTI 기준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주수입원인 두바이유가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두 유가의 가격차이 또한 줄어들 수 있음.
- 동절기 대비 난방유 재고량이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예년보다 부족하고, 이로 인해 난방유와 대체재 관계인 천연가스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음. 부시 집권과 함께 금년 동절기에 총체적인 에너지 문제가 부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음.

3. 한국의 대응 방안

□ 적극적 개방형 통상국가가 주요 대안

- 경제적·안보적 입장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자유무역 추진이 필요하며, 한미 FTA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가전략에도 맞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임.
 - 한국은 북한핵문제를 미국이 핵확산 방지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과 9/11 이후 대테러전의 한 축으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자체보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테러집단에 흘러 들어가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을 갖

고 있는 상태임.

- 해외투자자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상황이고, 이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
- 미국과의 적극적인 FTA추구는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보적 측면의 이익이 있음.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하여 경제성장, 투자, 무역 증가라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음.
- 한미 FTA로 인한 미국 시장의 접근성 증가로 대한국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임.
- 한미 FTA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견제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동북아 중심국가 달성에도 도움을 줌.

□ 스크린 쿼터 및 농산물 개방 대응

○ 스크린 쿼터

- 영화산업의 높아진 경쟁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쿼터를 축소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축소 시기와 폐지 시기는 협상력을 발휘해 적절히 정해져야 함.
- 미국 영화산업이나 유통산업으로의 진출 방안을 적극 연구, 고려해야 함.

○ 농산물 개방

- 한국은 FTA협상에서 미-이스라엘 FTA 등의 선례를 잘 이용하여, 양자간 FTA 논의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라운드인 DDA로 이 논의를 끌어 올리는 협상전략을 사용해야 함.
-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문제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A가 지지부진한 중요한 원인중 하나이며, 브라질과 미국은 이 문제를 놓고 통상마찰중이며 미국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산업임.
- 농산물시장개방은 DDA로 논의를 끌어 올려, 최대한 시간을 벌수 있으며, 개방의 불가피성은 피할 수 없으므로, 자유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적극 연구·개발 확충해야함.

□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협상 전략상 대응

- 제 2기 부시정부는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부시정부의 미온적 대처방법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특히 중국, 한국에 대해 통상마찰을 적극적으로 일으킬 것으로 보임.
-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적극적인 사전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부시정부의 통상마찰협상의 특징은 제소보다는 협상³⁾을 통한 양자의 이익추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지난 9월 미-EU는 항공기 보조금 협상이 실패한 이후, 서로 WTO에 상

3) 10월 5일, 아시아 담당 USTR 부대표가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에서 발언.

대방을 제소하였으나, USTR 대표는 제소이후에도 미국이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을 표명하여 통상협상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환율압력에 대한 대응

- 원화의 절상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원화절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고 수입가격을 낮춰 반드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
- 산업경쟁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함. 수출 가격경쟁력하락을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디자인으로 극복해야 함.

□ 고유가대응책

- 석유 수요국 연대를 통해 국내도입 석유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부시 집권 4년 동안은 석유산업과 중동중시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이 기간을 한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의 호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에너지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부존국과 통상 및 외교 관계를 긴밀히 가져야 함. 신대체에너지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범부처간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함.
- 엔진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내연 기관 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개발, 하이브리드카 상용화 지원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함.

<부시 집권 전반 4년과 집권 후반 4년 차이점 분류>

	제 1기 부시정부	제 2기 부시정부
외교관계	일방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일방주의, 동맹건설의 3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 - 한국의 의견을 1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존중할 것임
경제정책	감세정책, 기업투자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세정책 강화: 2001, 2003년 개인소득세 감세안 영구화 추진, 자본 이득세와 배당세 15% 이상 세율이하 가능성 - 재정적자 축소 움직임 - 기업투자촉진 지속적 추진
통상압력	소극적 통상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통상압력과 WTO를 통한 제소 - 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효력이 2005년 7월 종료. 의회의 자동연장을 받기위해 환율, 지적재산권, 보조금, 반덤핑판정등 압력 거세 질 것임 -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활용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자유무역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와 아시아최초 추진 - 외교안보적, 정치적 고려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한국,일본,대만에 제의 및 적극 추진 - 경제적 이익을 외교안보적 목적과 함께 고려
대테러정책과 북한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초점 - Pre-emptive 공격 -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북한핵 문제로 옮길 것임 - 북한핵문제를 핵확산방지와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더욱 심각하게 접근할 것임 - 미국은 외교적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춰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임. 중국을 적극 활용 - 지속적인 6자회담 추진. 그러나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 있음